■정부, 1976년 외교문서 11만 9천여쪽 공개

박정희, 미군 철수 저지 전방위 로비

1976년 미국 민주당 소속 지미 카터 후보의 대선 당선이 유력시 되면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해 한국 정부가 미국의 한반도 정책 방향을 바꾸기 위해 총력 로비전을 펼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박정희 정권은 미국 의회와 언론 등을 통해 통일교의 배후 지원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내 대책회의를 열고 통일교와의 관계청산을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일본은 일제시대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된 한인들의 귀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달라는 한국측의 요구에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입장을 보이며 거부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통상부는 4일 제14차 외교문서 공개를 통해 생산 또는 접수한 지 30년이 지난 1976년도 문서를 중심으로 11만9천여 쪽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문서에는 1976년 미국 의회의 한국관련 청문회, 사할린 동포 귀환문제, 조총련계 재일 한국인 모국방문, 비동맹 정상회의에서의 남북 외교전 등이 포함됐다.

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당선이 확실시되던 카터의 집권에 대비해 1980년까지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전술 핵무기를 계속 한반도에 배치할 수 있도록 미국을 설득한다는 대미 외교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미국 정치인들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벌인 '코리아 게이트'로 한미 관계가 얼룩졌던 1976년초 한국 정부는 미국 의원들과 활발히 접촉했다.

대권 유력 카터에 '한반도 정세 보고서' 극비 전달
朴정권-통일교 결탁 의혹 일자 관계 청산에 전력
日 정부 사할린 동포 귀환비 부담 거부 등 담겨 있어

정부는 1976년 7월 외무부와 중앙정보부 주도로 '한반도 정세 및 한미관계'라는 보고서를 작성해 비밀리에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로 당선이 확실시되던 카터 진영에 전달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개인자유의 신장에 앞서 공동체적 사회정의가 우선임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그해 8월 중순 조지아주 출신 사업가로 카터의 정치참모 역할을 했던 존 포프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김영선 당시 주일대사를 시켜 포프를 면담하게 하는 등 카터를 설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이와 함께 코리아 게이트가 비화하던 상황에서 함병춘 당시 주미대사는 한미관계 청문회를 앞두고 청문회가 한국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미국 의원들과 활발하게 접촉했다.

한국측이 미국 조야를 향해 전방위 로비를 펼치는 사이 미국에서는 통일교의 배후에 한국 정부가 있다는 의혹이 표출됐다.

문서에 따르면 당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도널드 프레이저 위원장은 전직 주미 대사관 간부의 증언 등을 토대로 문씨의 통역이자 주미 대사관 무관을 지냈던 박보희씨가 대사관 외교행랑을 이용, 대통령, 외무부장관, 중앙정보부장에게 직보하는 체계를 갖고 있다고 믿고 청문회를 추진했다.

또 뉴욕타임스 등 미국의 여러 유력 매체들은 경쟁적으로 통일교와 한국 정부의 결탁의 혹을 제기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처음에는 '종교문제에 정부가 논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이듬해부터 리틀 앤젤스에 대한 후원을 중단하는 등 통일교와의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1976년 8월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열린 제5차 비동맹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비동맹 회원국이었던 북한의 외교공세에 맞서 세계 유력지들을 상대로 다양한 홍보전을 전개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박정희 정권은 1976년 미국 시민의 북한 지역 여행제한을 해제하려는 미 정부의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로비활동을 전개했으며 이런 활동이 주효해 미 정부는 북한 여행 제한조치를 1년간 재연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막대 나선은하

미 항공우주국(NASA)이 3일(현지시각) 공개한 막대 나선은하 NGC1672의 허블 우주망원경 사진. 은하 내 성운 구성과 성간 먼지가 만들어낸 검은 띠의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휴스턴로이터=연합뉴스

백열전구·비닐봉투…다음세대 사라진다

美 포린폴리시誌 소개

생활 필수품이던 제품들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라진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또 조만간 유물로 전락할 운명에 처한 품목들도 적지 않다.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3일 다음 세대에 우리 주변에서 자취를 감출 품목에 백열전구와 비닐봉투, DVD, 바닷고기가 포함될 것이라면서 이들을 대체할 품목과 미래 전망을 함께 소개했다.

▲백열전구=지구온난화 논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에너지 효율이 낮다는 이유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는 각국 정부의 규제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백열전구는 에너지 효율이 5배 이상 높고 수명이 긴 절전형 형광등과 발광다이오드에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DVD=첨단기술의 발전속도 때문에 DVD는 상용화된 지 11년밖에 안됐지만 생존이 벌써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차세대 DVD로 개발된 대용량 광(光)디스크의 새 규격인 블루레이 디스크와 HD DVD, 인터넷의 주문형 비디오(VOD)가 DVD의 자리를 곧 대체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닐봉투=환경보호 운동으로 편리함의 상징이던 비닐봉투도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다. 비닐봉투의 생산량은 2002년 한해에만 4조~5조에 달할 정도로 가히 천문학적이었다. 비닐봉투는 천으로 만든 봉투나 재활용 종이봉투, 분해가 되는 비닐봉투 등에 의해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바닷고기=남획과 오염, 기후변화, 생선 수요증가가 겹치면서 세계 바다의 자연산 물고기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 때문에 참치나 대구 같은 어종도 멸종 위기에 직면했다. /워싱턴=연합뉴스

물대포 명중…살인자 추락

경찰의 투항 명령에 불응한 살인 용의자가 3일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중국 랴오닝성 선양의 병원 건물 아래로 떨어지는 과정을 포착한 사진들. 이 용의자는 병원 창문에 매달려 2시간여 동안 경찰과 대치한 끝에 체포됐다. /로이터=연합뉴스

리처드슨 주지사 8일 방북

〈美 민주당 대권주자〉

북·미 사전 조율 여부 주목

미국 민주당 대권주자인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가 오는 8~11일 민간 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한다고 3일 발표했다.

데이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리처드슨 주지사와 앤서니 프린시피 전 보훈처장관이 민간 양당합동 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한다"며 이번 방문은 "(한국전) 실종 미군의 유해 반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페리노 대변인은 리처드슨 주지사 일행의 이번 방북이 북한측의 초청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대표단을 지원하고 기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소수의 미국 관리들이 동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연합뉴스

/ 위안부 문제 일본의 두 얼굴 /

아베, 부시에 위안부 강제성 인정

아베 신 일본 총리는 3일 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갖고 군대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교도통신이 정부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와 관련, 아베 총리의 솔직함을 평가했으며 오늘날의 일본은 2차 대전 당시와는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백악관이 발표했다.

아베 총리는 부시 대통령에게 자신의 '진의'가 언론에 정확하게 보도되지 않아 직접 전화로 설명을 하고 싶다며 일본은 구(舊)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河野)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한 것으로 교도통신은 전했다.

아베 총리는 부시 대통령에게 "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연민을 느낌을 표명했다"고 해명했다.

아베 총리가 부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위안부 문제를 해명한 것은 오는 26, 27일 미국 방문을 앞둔 상황에서 미 하원이 위안부 사죄요구 결의안을 논의하는 등 미국 내에서 고조되고 있는 비판 여론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워싱턴도쿄=연합뉴스

자민당 의원들 '결의안 저지' 訪美

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군대 위안부 강제모집을 인정한 고노담화의 수정을 요구해 물의를 일으켰던 '일본의 장래와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의원 모임'이란 이름을 내걸고 있는 일본 자민당 수구의원들이 이번에는 미국 하원에 제출된 위안부 강제동원 사죄 요구 결의안을 저지하겠다며 방미를 추진하고 있다.

4일 NHK에 따르면 방미를 추진하고 있는 사람은 나카야마 야스히데 중의원의원 등 이 모임 소속 의원 일부다.

이들은 "우리의 조사에서는 정부나 군에 의한 강제연행의 사실이 없다. 결의안의 근거가 되고 있는 사실관계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나카야마 의원 등은 결의안 채택 저지를 위해 이달말께 직접 미국을 방문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일정과 방문자 수 등을 최종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달초 고노담화 수정을 목적으로 위안부 강제연행 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벌일 것을 요구하며 쟁점화를 시도했다.

NHK는 자민당내에서도 이런 행동에 대해 "쓸데없이 문제를 키우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정치권 분위기를 소개했다.

/도쿄=연합뉴스